

OECD 加入과 우리 經濟의 對應

吳 定 圭*

1. OECD 概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미국이 유럽經濟復興計劃(마셜플랜)의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48년 4월 설립한 歐洲經濟協力機構(OEEC)가 보다 광역적인 經濟協力體로의 발전 필요성에 따라 확대된 것으로 1961년 9월 창설되었다. 美·蘇 냉전 체제하에서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수호하는 집단경제안보체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창설 당시 20개국이었던 회원국수는 현재 25개국으로 늘어났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만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가장 최근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한 나라는 멕시코다. 비회원국이긴 하지만 유고는 OECD와의 兩者協定에 의거, OECD활동에 참여하는 特別地位(Special Status)를 보유하고 있으며, 헝가리, 폴란드, 체코는 1991년부터 동구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OECD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90년대 들어 OECD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이래 1993년에 마련한 「新經濟5개

年計劃」에서 OECD 가입을 1996년말로 확정하고 이러한 우리의 의사를 OECD에 통보한 바 있다. 정식가입 이전에라도 經濟開發檢討委員會(EDRC) 등 각종 위원회에는 옵저버 혹은 정식회원의 자격으로 OECD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오고 있다.

OECD는 현재 전세계 총 GDP의 86%, 총인구의 17%, 총교역의 72%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經濟協力體이며 회원국 1인당 평균소득은 2만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의 기본적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OECD는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고 회원국간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을 토의하고 협조·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회원국 政府代表들이 회합하여 각국 경제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필요한 경우 각국간 政策調整을 수행하기도 한다. 1,950여명의 정규인력으로 구성된 OECD사무국은 자료수집 및 연구·분석작업을 통해 회원국 대표간 토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OECD는 정책토의활동을 통하여 일반적 합의를 도출하는바, OECD의 각종 決定 및 勸告事項은 회원국 전체의 合意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회원국이 반

* 經濟企劃院 對外經濟局 書記官待遇

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적 결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국가의 특수사정에 따른 규정적용의 유보도 가능하다.

세계, OECD는 세계 선진경제에 대한 검토자료 및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세계최대의 자료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별 회원국의 경제현황을 평가하여 보고서로 발간하며 경제·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검토, 분석 및 정책건의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OECD는 理事會, 執行委員會, 事務總長 등의 상부조직과 이의 지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전문분야별 위원회와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民間諮問機關(Advisory Body) 및 半獨立的 附屬機關(Autonomous Body)을 거느리고 있다.

2. OECD 加入의 意義

지난 6월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OECD 定期閣僚理事會에서는 1996년말까지 OECD에 가입하겠다는 우리 政府의 공식 의사표명을 적극 환영하면서, OECD事務局에 대해 우리의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가입을 위한 교섭을 시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앞서 발표된 OECD의 우리 경제에 대한 공식적인 調查報告書는 우리 경제가 OECD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30여년간 선진국들만의 政策協議의 場이었던 OECD에 가입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에게 앞서 OECD 가입을 신청한 멕시코는 약 1년여의 가입교섭을 마무리짓고 지난 5월 18일 25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와 비교하여 객관적인 경제

여건상, 크게 나을 것이 없는 멕시코의 OECD 가입은 우리의 가입 노력에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는 면도 있다. 또한 아직 OECD가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구국가들도 우리에게 앞서 OECD 가입의사를 공식표명하는 등 가입에 매우 적극적인 상태이다.

이들 국가들의 OECD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는 달리, 아직도 우리 국내에서는 OECD 가입을 否定的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류도 적지 않다. 어려웠던 UR협상과정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양허하였던 市場開放이 OECD 가입을 통해 재론될 수 밖에 없는바,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분인 농수산업, 금융업, 서비스 등에 있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이 근간을 이룬다. UR/농산물협상, 국제환경협상 등에서 어렵게 확보하였던 개도국 지위를 반납하고 개도국에 부여되는 一般特惠關稅制度(GSP)로부터도 졸업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게 되면, 他 開途國에 대한 公的援助(ODA)도 늘려야만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상당부분 OECD의 기본성격 및 관련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自由化 및 開放化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OECD 가입교섭과정을 통해 선진국이 마련한 각종 규범에 우리 제도를 일치시키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先進化는 비단 OECD 가입이라는 과정이 없더라도 우리 經濟가 國際化를 위하여 반드시 달성하여야 할 필연적인 과제다. 또한 OECD 가입교섭은 주어진 모든 협상범위에 대해 양허안을

제출해야 했던 UR협상과는 달리, 우리가 취사선택하여 유보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반 규범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환경분야 등에서의 개도국 지위 및 GSP 졸업, ODA 공여 등도 자동수용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OECD 가입으로 인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OECD 회원국중에서도 터키 등 일부국가는 아직도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고 있다.

OECD 가입에 대해 소극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면, OECD 가입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자명해진다. 우선 우리 經濟制度의 先進化를 가일층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과거 30여년간 이룩해 놓은 量的인 성장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質的인 성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와 통제 위주의 개발년대 경제운용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OECD 가입은 이러한 우리의 經濟自律化 노력을 더욱 촉발하는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環境, 勞動, 競爭政策 등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多者間懸案에 대해서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선진국간 정책협의를 場인 OECD는 세계 경제질서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역할은 특히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예컨대 UR협상은 OECD회원국간에 그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토론이 있는 후, 범세계적인 公論化의 과정을 밟아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론화 초기단계인 환경 등 새로운 다자간 현안에 대한 OECD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 놓

는다면, 이러한 분야의 多者間協商이 공식 개시되더라도 우리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밖에 선진 각국의 축적된 경험 및 정보의 활용으로 선진국형의 경제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활동 및 주요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회원국간 상호 의견과 정보교환을 통해 대외 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높이고 환경, 원자력, 구조조정문제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능력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철강, 조선, 반도체분야 등의 시장개방에 대한 雙務的 問題를 多者間 협의무대로 이끌어내 논의함으로써 미국 등 특정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제력 신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선진 각국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심어주는 동시에 우리 국민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3. 主要部門別 對應

가. 金融部門

OECD 가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는 外換 및 資本去來分野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위해 배전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은 뒷전으로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개별 민간기업의 자금동원능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위험부담이 따르는 기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自己信用만으로도 해외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게 된 우리 기업입장에서 볼 때

국내의 금융조달 여건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金融自律化 및 開放化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예컨대 스위스의 國際經營開發院(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1993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대만, 멕시코 등 15개 경쟁상대 개도국중 금융부문 경쟁력이 10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우리의 제조업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은 6.3%로서 일본의 2.2%나 대만의 2.4%에 비하여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우리의 預貸金利差가 4.6% 포인트인 반면 일본은 2.2% 포인트, 미국은 3.9% 포인트인 점도 우리 金融仲介機能의 非效率性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이제 外換 및 資本去來의 자유화와 金融開放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리를 낮추는 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물론 외환 및 자본거래자유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通貨 및 物價管理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앞서 4~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중 급속한 자본자유화 및 금융자유화를 추진한 바 있는 뉴질랜드와 멕시코 등이 비록 과도기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강력한 財政 및 金融緊縮을 통해 금융산업의 체질개선과 물가 안정을 이룩했던 점을 우리는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하겠다. 더우기 이들 국가의 금융자유화 추진당시의 경제여건에 비해,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財政收支를 유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외환 및 자본거래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여겨진다. 긴축기조유지 이외에도 해외로부터의 本源通貨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도록 海外直·間接投資의 확대

등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나. 貿易産業部門

1964년 OECD에 가입한 日本의 경우를 보면, 경제운용과정에서 貿易自由化가 크게 진전되었다. 일본은 불가피한 수입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를 안정기조로 유지하기 위해 수출금융 지원강화,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제도의 창설 등 수출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른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이 OECD에 가입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무역 및 산업분야에서 OECD 가입 때문에 비롯되는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이미 일부 농산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개방하였으며, 금번 UR협상과정을 통해 다른 나라와 함께 關稅 및 非關稅障壁 緩和를 양허한 상태이다. 또한 이제 WTO협정이 발효되면, 3년 이내에(개도국의 경우 8년) 수출진흥이나 특정산업을 겨냥한 補助金은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原產地規定 등 우리의 수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및 보조금 등 산업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켜 나가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술개발지원, 토지개발지원, 환경보호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社會間接資本 시설확충, 인력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산업활동의 애로요인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 環境 등 새로운 分野

環境, 勞動, 競爭政策 등 새로운 多者間懸案들이 UR협상처럼 공식교섭단계로까지

발전되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이미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WTO체제 출범을 계기로 공론화될 가능성도 높아졌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만큼 다자간 규범제정을 위한 교섭개시시기도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UR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미리미리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적 논의방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신속한 정보수집은 각종 해외정보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역시 OECD처럼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협의의場に 논의 초기단계부터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국제적 논의가 구체화될 각종 多者間, 雙務間 교섭에 대비하여 협상대응체제를 미리 갖추어 우리의 교섭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외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部處間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문제와 같이 국제적 공론화단계가 임박한 중요현안에 대해서는 汎部處間 對策班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인 대응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국내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일일 것이다. 우리 경제구조가 선진화되면 새 이슈의 공론화를 경계할 필요성도 적어지며, 우리가 오히려 선진국의 보호주의적 경향을 사전예방하는 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기술과 환경산업을 내실있게 육성할 경우, 그린라운드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우리가 기술혁신을 산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삼아 技術立國의 기초를 마련할 경우, 기술라운드는 오히려 우리 산업의 高度化·先進化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公的援助(ODA)部門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규모확대에 부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ODA도 우리의 對外進出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ODA는 OECD 가입과 관련된 자동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실제 현 25개 회원국중 그리스, 아이슬랜드, 터키, 멕시코는 OECD에서 ODA업무를 다루는 開發援助委員會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이들의 GNP대비 ODA 공여수준도 우리의 0.05%와 유사한 수준이다.

물론 우리의 ODA 공여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나 우리의 경제력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앞으로 ODA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규모의 확대 이전이라도 우리의 ODA가 受援國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와 受援國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受援國 경제여건에 맞는 협력사업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와 경험증진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중점협력사업 및 우리에게 상대적인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집중지원함으로써, 협력효과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4. 結 語

우리의 OECD 가입문제는 궁극적으로 서

비스시장의 추가개방, 그중에서도 資本自由化 및 金融市場開放問題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문제가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OECD 가입사까지의 기간중 자본·금융 시장개방문제, 국제투자의 자유화문제, 환경분야의 기준충족문제, 제반 법, 제도, 관행의 국제화문제 등 주요 핵심분야의 내용과 영향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우리의 OECD 가입 추진에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經濟企劃院이 중심이 되어 OECD 가입에 대비한 각 분야별 심층 검토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OECD 가입에 대비한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先進經濟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OECD가 요구하고 제안하고 각종 선진규범을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체질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지불해야 할 코스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부담」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으며, 「이득」은 「부담」보다는 나중에 실현되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OECD 가입 추진에 따른 대응전략수립과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1 page에서 이어짐>

이어, Kelly Springfield, 미셸린 계열의 UGTC사 등이 추진하고 있으며 승용차용 래디얼 타이어와 바이어스 타이어의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중소업체의 중국내 생산활동으로는 캐나다의 UTRB사가 산업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만의 Cheng Shin Rubber사와 Kenda Rubber사가 각각 자전거 및 산업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이외 벨기에의 NV Bekaert SA가 합작투자를 통해 타이어와 고무제품용 Steel Cord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타이어업체의 전략적 제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제휴는 선진국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선도기업과 개도국기업이 중심이 된 추종기업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자본제휴는 중국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타이어업체를 포함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전략적 제휴로 연구개발의 중복성회피 및 기회확대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에 의한 매출증대와 생산비용의 절감, 그리고 신규사업의 위험분산 및 불확실성의 제거와 제품개발 및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기술개발비용의 분담과 신시장 및 신기술에의 신속한 접근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상호연관성이 높은 사업부문에서 자율적이며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개발기술의 단기간내의 상용화와 전통사업영역에서의 경쟁지위의 재정립 및 자본의 국제화를 통한 기업경영의 범세계화를 촉진시켜 세계 기업간 경쟁체제를 변화시킬 전망이다.